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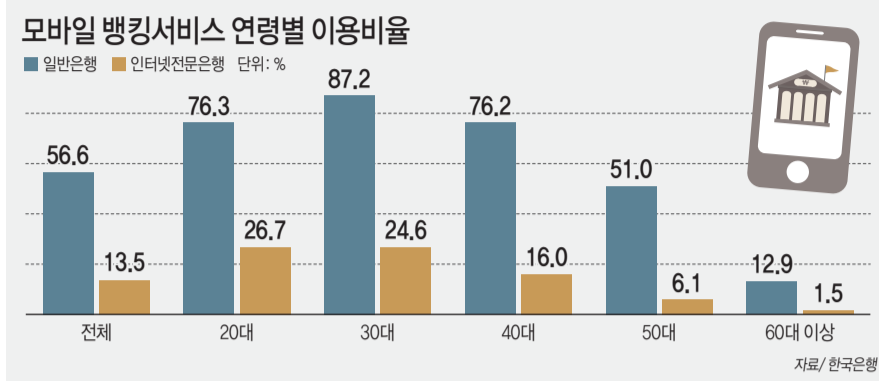
가속화되는 디지털금융 속 소외되는 고령층

# 모바일뱅킹 이용률 13%... 어르신 위한 별도 앱 개발해야

시니어 금융소비자를 위한 간담회

이순호 금융연구원  
금융 착취 유형 분석해 교육해야

변혜원 보험연구원  
주된 수요층, 전용상품 개발 필요



“정부가 핀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금융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지만 정작 고령소비자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고령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보다 직관적이고 친화적인 상품이 개발돼야 한다.”

금융연구원 이순호 연구원은 13일 ‘디지털 금융시대 시니어 금융소비자를 위한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는 “디지털 금융거래는 대부분 비대면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온라인 금융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금융서비스 이용 시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며 “특히 노령 소비자층은 디지털 금융이 확대될수록 금융서비스 이용을 꺼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은행이 발표한 모바일 금융서비스 이용행태 조사결과에 따

르면 전체가계의 56.6%가 일반은행의 모바일 뱅킹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만 50·60대 이상 연령층 이용률은 각각 51.0%, 12.9%에 머물렀다. 간편결제와 간편송금 등 모바일 지급서비스도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이용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핀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한 금융서비스가 확대될수록 60대 이상 노령 소비자는 금융소외를 경험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날 이 연구원은 “핀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금융서비스가 대안화되면서 노령소비자의 금융소외는 더욱 심각해 질 수 있다”며 이들을 위한 금융 상품이 확대돼야 한다고 내다봤다. 그는 “현재 정부는 고령소비자를 위해 투자자의 자유의사만 지칭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최근 고령소비층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이슈를 과

악해 개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 영국 등 외국은 금융상품이 고령소비자의 필요를 충족하고 있는지, 상품과 서비스가 고령층에 알맞게 고려되고 있는지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내도 고령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분석해 맞춤형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컨대 고령소비자 자산확실성이 높고 건강관련 비용지출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이를 위한 상품을 개발하고, 그들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분석해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연구원은 “우선적으로 고령소비자가 처한 환경을 파악해 고령소비자의 필요를 충족시켜줘야 한다”며 “이 후에는 노령 소비자가 빠지기 쉬운 금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디지털 금융시대 시니어 금융소비자를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앞줄 왼쪽 네번째)이 관계자들과 포즈를 취했다. /민병두 의원실

용착취 유형 등을 정리해 소비자 교육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보험소비자 보호를 주제로 발제한 보험연구원 변혜원 연구원은 “고령 소비자의 경우 상품보단 판매자와의 관계로 보험상품을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며 “마케팅교육과 핵심설명서 교육 등 판매자 교육을 강화하고 판매자 보상체계를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령소비자의 경우 보험상품 가입이 주로 대면방식으로 이뤄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가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자 교육이 강화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변 연구원은 또 직관적이고 사용자

친화적인 고령소비자 전용 앱을 마련해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인구고령화에 따라 보험시장의 주된 수요층도 고령화됐다”며 “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를 개발하고, 건강나이를 이용한 보험료 할인과 고령자 전용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는 시니어 금융소비자의 어려움을 분석하고 금융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는 민병두 정무위원장을 비롯해 이순호 금융연구원, 권민경 자본시장연구원, 변혜원 보험연구원 등 총 50명 가량이 참석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 “국민연금 S코드, 안정·수익성 최우선 고려를”

기금운용 수익률 마이너스로 부진  
한경연, 의미 살리려면 독립성 필요

〈국민연금 기금 운용방침 관련 법령 및 판례〉

국민연금법 제102조 제1항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수익을 최대한으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운용되어야 하며, 가입자 등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대한 투자는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고 함
헌법재판소 1996.10.4. 96헌가6	“일반적으로 연금기금의 운용에 있어서는 안정성, 수익성, 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나, 그 중에서도 장기적인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이 요청된다.” * 수익성을 최우선적 목표로 본 소수의견도 제기되었음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전경. /국민연금

국민연금이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행사에 있어 기금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기금운용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추락하는 등 부진하자 수익률 제고에 대한 지적을 받아 왔다.

실제로 국민연금은 지난해 -0.92%의 기금운용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마이너스 수익률이다. 기금손실평가액은 총 5조9000억원으로 추정된다.

13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과 관훈 선문대 교수에게 의뢰한 ‘국민연금기금의 현황과 스튜어드십 코드(2019)’ 보고서에서 “최근 도입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가 의결권 행사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지배구조도 정치적 판단을 할 가능성이 많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결권 행사의 기본원칙과 방향은 안정성, 수익성 확보로 규정돼야 한다”며 “국민연금법과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통해 살펴봤을 때 국민연금 기금 운용은 안정성과 수익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기금 운용은 ‘사회책임투자(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SRI) 등 공공성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

는 일부 주장에 국민연금법과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들어 전면 반박한 것이다.

국민연금법 제102조 제1항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그 수익을 최대한으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운용돼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판례에서는 장기적인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도 했다.

또 한경연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의 진정한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독립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민연금 운영 주체는 투자전문가가 아닌 공공성과 중립성만을 고려한 위원들로 구성된 정부의 영향력과 정치적 이용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

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기금운용 주체로는 정치적 영향력에서 독립된 투자 전문가로 구성하고 기금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의결권 행사를 포함한 기금운용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봤다.

실제로 세계 3대 연기금 중 하나인 일본 공적연금펀드(GPIF)의 경우 기금운용위원회는 의결권 행사에 관한 기본 지침만 위탁기관에 제시할 뿐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지 않는다. 판단을 위탁기관에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인 의결권 행사지침도 갖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연금의 정치적 이용에 대한 논란이 일지 않았다.

한경연은 의결권 행사 자문회사가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면서 결과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잘못된 의결권 행사 조연이 있는 경우 피해는 주주가 받게 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의결권 행사 자문회사 운용 주체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이익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막아 중립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희주 기자 hj89@

## 정부, AI 활용 신약개발에 258억 투자

3년간 플랫폼 구축에 집중투자  
사업 성공엔 개발기간 절반으로

흥재단, 이화여자대학교 4개 팀이 연구를 수행한다.

정부가 인공지능을 활용한 신약개발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앞으로 3년간 258억원을 집중투자하기로 했다.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경우, 신약개발 기간이 절반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는 13일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약개발을 위해 인공지능 신약개발 전문가로 이루어진 6개 연구팀과 운영관리기관을 구성하고, 향후 3년간 258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달 정부가 발표한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의 후속 조치다.

후보물질 도출, 임상시험 등 신약개발 단계별로 맞춤형 인공지능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주요 목표다. 정부는 기술개발 효과가 가장 좋을 것으로 판단되는 후보물질 발굴, 신약 재창출, 스마트 약물감시 3개 분야를 선도적으로 개발하기로 했다.

우선, 신약 개발의 첫 단계인, ‘신약 후보물질의 발굴’을 돕는 인공지능 플랫폼 개발을 위해, 주식회사 아론티어, 중앙대학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화여자대학교 4개 팀이 연구를 수행한다.



아론티어는 서울 아산병원 유전체 데이터, 간 오가노이드(미니 장기) 실험 데이터 활용해 폐암·뇌암 등 치료제 개발 플랫폼을 개발한다. 중앙대학교는 한국화학연구원의 화합물 데이터를 바탕으로 질병 치료의 단서가 되는 단백질을 예측하여, 퇴행성 뇌질환에 특화된 플랫폼 개발을 수행하게 된다.

대구경북첨복재단은 재단 신약개발 지원센터의 선형 연구를 기반으로 모델을 만들고, 유한양행 등 주요 제약사의 화합물 데이터를 활용해 표적 항암제 개발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화여대는 항암제, 섬유유 치료제를 연구하며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의 슈퍼컴퓨팅 인프라를 활용한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미 개발된 의약품을 활용한 신약을 개발하는 ‘신약 재창출’도 진행된다. 재창출 신약의 경우, 기존 임상 허가를 통해 안전성이 검증된 만큼, 추가 임상기간이 짧은 장점이 있다.

‘신약 재창출’ 플랫폼을 개발하기 위해 한국과학기술원 연구팀은 기존 약물 작용기전을 모사한 딥러닝 모델을 개발하고, 실험 검증 등을 통해 플랫폼을 발전시킬 계획이다.

의약품 시판 후에야 이루어졌던 약물 감시체계도 보완된다. 서울 아산병원은 면역항암제 빅데이터를 집중 학습해, 약물 이상 반응의 조기 예측과 신속 대처를 한 약물 감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세경 기자 seilee@